
「2021-제3호(Vol. 11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4. 4.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야별 목차

분야	제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지역경제보고서(2021년 1/4분기) •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새로운 불안 요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 재정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대한민국 재정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4. 정책 및 연구 (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 앵겔계수와 슈바베계수의 동반 급등-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 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뉴노멀시대 대응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 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맞손’ • 환경부 추경예산, 환경현안과 고용창출에 동시 대응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1. 경제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 OECD는 '20년 세계경제가 △3.4% 역성장 했으며, '21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20.12월 전망 대비 +1.4%p 상향 조정('20.12월 4.2% → '21.3월 5.6%)
- 한국경제의 경우, '21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기존 전망대비 +0.5%p 상향 조정('20년 성장률 실적 △1.0%)
- OECD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을 위해 주요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 → 주요 정책권고의 상당 부분이 한국판 뉴딜, 추경(3.2일 정부안 발표)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함.

[바로가기](#)

■ 지역경제보고서(2021년 1/4분기)

한국은행

- (경기개황) 1/4분기 중 지역 경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임.
- (강원권 경제) 1/4분기 강원권 경기는 전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 수준의 생산 동향을 보임.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함.

【 2021년 1/4분기 중 강원권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

권역	제조업		서비스업	
	평가	주요내용	평가	주요내용
강원권	보합	◦의료기기: 영업활동 일부 회복으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알콜음료: 외식업 부진 및 수출 감소 ◦시멘트: 내수 출하 정체	보합	◦숙박·음식점, 레저, 운수: 겨울 축제 개최 취소, 스키장 운영 제한 등으로 인한 겨울 관광객 특수 위축

- (현장리포트)
 - ① 강원지역, 관광산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겨울축제 취소 등으로 부진: 한국관광공사가 추정한 강원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26.9%, 관광지출액은 30.8%, 숙박지출액은 67.0%가 각각 감소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백신접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관광경기 회복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② 강원 영동지역, 친숙한 미디어의 배경으로 다가와: 강원 영동지역이 지닌 자연경관, 고즈넉한 삶, 계절을 아우르는 야외활동, 독특한 식문화 등 다양한 매력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에서 이목을 이끄는 무대가 되어왔음.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당분간 문화미디어 콘텐츠의 촬영지가 국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동지역의 관광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해봄.
- (지역경제 연구) 충청권의 이차전지산업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점검하고, 경남권에서는 ICIO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경남경제를 분석함.(전문 참조)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양회 개요)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14.5 계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경제정책 방향)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평가 및 시사점)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새로운 불안 요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지난겨울부터의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경기 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했던 ‘20년 4분기 경제 성장세가 약화됨. 한편, 1월에 들어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임.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수요부문별 동향은 소비 불균형 개선,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 확대, 건설수주 증가세 유지, 수출회복 지속, 5%대 실업률,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경제심리 개선 등이며, 산업별 동향은 제조업 생산에서는 출하가 크게 늘고 재고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특징이 나타나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불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코로나19 추가 재확산 ② 경기 양극화 고착, ③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들 수 있음. 2021년 경기 흐름은 빠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경기 추세의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 차질로 인해 충분한 집단면역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연말 대규모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재침체 가능성이 존재함.
- (시사점) 한국 경제가 하루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①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선부른 경기부양’보다 ‘불황 국면 버티기’에 정책적 역량 집중 ② 지역별 수출 경기 회복 속도 격차에 대응한 시장접근 전략의 재정립과 다시 대두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통상전략 마련 ③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 억제 ④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 시장 정상화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 ⑤ 청년층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비중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0 본예산	2020 제4회 추경 (A)	2021 본예산					증감	
			정부안	국회 심사결과			확정(B)	(B-A)	(B-A)/A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481.8	470.7	483.0	0.4	△0.8	△0.4	482.6	11.9	2.5
총지출	512.3	554.7	555.8	8.1	△5.9	2.2	558.0	3.3	0.6
관리재정수지	△71.5	△118.6	△109.7	-	-	-	△112.5	6.1	
(GDP대비, %)	(△3.5)	(△6.1)	(△5.4)				(△5.6)	(△0.5%p)	
국가채무	805.2	846.9	952.5	-	-	-	956.0	109.1	12.9
(GDP대비, %)	(39.8)	(43.9)	(47.1)				(47.3)	(3.4%p)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12.

-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업데이트) * 부처별 재정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23.4 (126.9)	129.5 (131.9)	144.7 (145.8)	161 (162.6)	180.5 (197.8)	199.7	10.1
2. 교육	53.2 (55.1)	57.4 (59.4)	64.2 (64.4)	70.6 (70.7)	72.6 (71.0)	71.2	6.0
3. 문화·체육·관광	6.6 (6.9)	6.9 (7.0)	6.5 (6.5)	7.2 (7.3)	8.0 (8.1)	8.5	5.2
4. 환경	6.9 (7.0)	6.9 (7.1)	6.9 (7.0)	7.4 (8.6)	9.0 (9.2)	10.6	9.0
5. R&D	19.1 (19.1)	19.5 (19.5)	19.7 (19.7)	20.5 (20.9)	24.2 (24.3)	27.4	7.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6)	16.0 (18.8)	16.3 (18.2)	18.8 (20.5)	23.7 (35.5)	28.6	11.9
7. SOC	23.7 (23.7)	22.1 (22.2)	19.0 (19.1)	19.8 (20.4)	23.2 (22.9)	26.5	2.3
8. 농림·수산·식품	19.4 (19.6)	19.6 (19.8)	19.7 (19.8)	20 (20.3)	21.5 (21.4)	22.7	3.2
9. 국방	38.8 (38.8)	40.3 (40.3)	43.2 (43.2)	46.7 (46.7)	50.2 (48.4)	52.8	6.4
10. 외교·통일	4.7 (4.7)	4.6 (4.6)	4.7 (4.7)	5.1 (5.1)	5.5 (5.1)	5.7	3.9
11. 공공질서·안전	17.5 (17.5)	18.1 (18.2)	19.1 (19.1)	20.1 (20.2)	20.8 (20.7)	22.3	5.0
12. 일반·지방행정	59.5 (62.9)	63.3 (65.1)	69.0 (69.1)	76.5 (76.7)	79 (94.0)	84.7	7.3

주: 본예산 기준, 괄호는 추경 기준, 연평균증가율은 본예산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채무)



주: 1. 2019년까지 결산기준, 2020년 추경기준, 2021년 본예산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2019.6.4.)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업그레이드

기획재정부

- 추경 국회 심사결과와 특징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를 반영함.
- 국회 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0.4조원 증가한 483.0조원(전년대비 +0.3%),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4.9조원 증가한 572.9조원(전년대비 +11.8%)임.
- 주요 증감 내용은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을 증액*하고, 증액재원 마련을 위해 시급성이 낮은 지출사업에서 1.4조원을 감액함.
 - * 증액내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1.1조원, 농어민 종합지원 0.2조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확대 0.05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확대 0.1조원
- 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20.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해왔음.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재정지원 대책 경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1.3.23. 제정/ '21.3.25. 시행)

법제처

-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해오던 영업자 준수사항 및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의 절차 및 방법,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3.16. 개정/ '21.4.1. 시행)

법제처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 등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내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3.11.)

금융위원회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및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최운열 의원, '20.5월)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진출 활성화(이용우 의원, '20.12월)
 - ** 규제입증위원회('20.7월), ④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20.11월)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정보교류차단제도 개선 ②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중투자) 신용공여 기준 설정 ④ IPO 공모주 중복 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등임
- 향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1.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국회에산정책처

- (목적) 의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결산 심의 및 감사권 관련 헌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국 입법례 분석 및 평가내용은 전문 참조
- (우리나라 결산 심의 및 감사권 관련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① 감사원의 국회 지원을 통한 국회의 재정통제권강화를 위하여 감사원을 국회 소속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음 ②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경우 감사원이 국회의 재정통제 지원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주요한 임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원이 국회를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사원의기능에서 직무감찰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③ 국회의 결산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결산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며, 결산의 심사결과에 따른 국회의 시정요구권과 정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④ 국회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통제를 위하여 신규차입 없는 재정균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채무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결론) 개정안은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며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라는 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국회에산정책처

- (서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함.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임.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됨
- (성과 분석결과) ①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함 ②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쌀재배 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함 ④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임 ⑤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계점 및 과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005년 도입된 이후 15년밖에 경과하지 않아 자료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통계학적 자유도 문제를 고려하여 재배면적과 영향요인 사이의 계량분석은 설명변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음.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들어가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음.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쟁점들을 검토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변천 경과)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984~2000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2020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년~)
- (제도 변화 분석)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정액기술료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세부적인 징수기준과 용어도 크게 변경됨.
- (주요 쟁점) ① 징수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우려 ② 기술기여도·수익 등 주요 개념의 정의 미흡 ③ 연구개발수익 납부 유형별 용어 미비 ④ 법령 미비로 인한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이 있음.
- (나가며)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무적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전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앵겔계수와 슈바베계수의 동반 급등—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 (개요) 최근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의식주 지출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에 국민계정의 가계소비지출 통계를 이용하여 의식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비중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봄.
- (분석 결과) 가계의 기본적 생계유지용 소비인 의식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로 2019년의 35.1%에서 1.7%p가 급증(15년 전인 2005년 3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하였음. 우선 가계소비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앵겔계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는 2019년 11.4%에서 2020년 12.9%로 1.5%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년 전인 2000년 1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다음으로 슈바베계수(임대료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는 2019년 17.6%에서 2020년 18.7%로 1.1%p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4년 전인 2006년 1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앵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급등의 원인) ①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미래 불확실성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들 수 있음 ② (밥상 물가 급등) 앵겔계수 급등은 최근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③ (주택 시장 불안) 슈바베계수 급등은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이에 따르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가계의 기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가계 실질 소득 확충을 위해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② 소비 심리의 과도한 위축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내수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함 ③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함 ④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 노력을 경주해야 함.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 지난 30년 동안 1인 가구는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전체 가구의 6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소비의 상당 부분을 소형 가구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1인 가구가 가장 높지만 1인 가구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가전기기 소비자는 ‘가족’으로서의 소비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로 변화되었고 다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TV나 공조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1인만을 위하여 구비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에너지소비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전체 모범가구 중 가장 전기를 적게 사용한 가구는 월 4.01Mcal이고 월평균 전기에너지소비량은 모범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95.27Mcal, 171.81Mcal로 모범가구에서 약 45% 더 적게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대 대학생, 30~40대 회사원, 60~70대 노인 가구의 하루 생활 패턴을 조사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가전기기 소비전력을 적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사용 유도로 하루 19~25%의 에너지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에너지 전력 절감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상에 따라 1인 가구의 가전기기 소비 및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에너지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감 방안이 필요함.

[▶바로가기](#)

■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뉴노멀시대 대응

- 지난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량 감소,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었음.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현장 조직을 통한 중소기업 동향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의 매출 및 수출도 여전히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함.
-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 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3低(低성장, 低금리, 低물가)의 경제 질서가 뉴노멀이 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일상화 되어 또 하나의 뉴노멀로 작동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 다가올 뉴뉴노멀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과 5G, AI 등 광범위한 기술의 대혁신, 탈세계화 확산과 리쇼어링 증가 등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특히 비대면 경제 트렌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업종에 ICT, AI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혁신 가속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될 것임.
-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전략산업의 육성 및 4차 산업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음.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산업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 (목적) 일자리, 실업 문제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실업 문제, 특히 구직-구인 간 발생하는 공간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로 인한 실업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황)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정부 고용정책 검토) 중앙주도와 함께 지역주도 측면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져 있어 구조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 지역의 실업유형별 분석, 구인-구직의 공간 불균등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광역적 접근성에 기반을 둔 통근가능권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의 존재는 공간적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적 권역(functional areas)’으로써 의의를 가짐.
-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①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지역노동시장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 ② 정주환경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 방식 등을 고려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방안 마련
 - ③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 일자리 매칭을 위한 협약사업 및 중앙·지방의 종합적 거버넌스체계 개편

[바로가기](#)

■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서론)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그 동안 세수규모를 이전보다 늘려왔고, 관련 법제 등을 개선·정비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런 노력이 지속 중에 있음. 하지만 현행 지방세제는 세수기반의 취약,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변화된 상황 반영의 미흡, 불완전한 법제, 불합리한 운영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 * 지방세제 개편의 연혁과 특징, 사례와 관련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 참조
- (지방세제 발전 방향) 현재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틀의 지방세체계 구축이 요구됨. 전자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운용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운영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며, 후자와 관련하여는 기간세 기틀의 마련,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효적 담보, 미래지향적 지방세 틀의 모색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재정
학회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함.
- 정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함.
- 2022년도 예산안은 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② 미래 혁신투자, ③ 민생·포용기반 구축,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임.

[바로가기](#)

■ 복지부, 강원도 및 5개 기업과 업무협약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맞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목) 14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함.
 - * 공기업(3) -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예코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민간기업(2) - (주)디피코, (주)BGF리테일(CU)
-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 노인돌봄공동체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55개 창출 및 취약계층 156명 지원

[바로가기](#)

■ 환경부 추경예산, 환경현안과 고용창출에 동시 대응

환경부

- 환경부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힘.
-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임.
-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922억 원,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 배치)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56억 원, 현장인력 405명 확충) ③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16억 원, 민간감시단 200명 추가 배치) ④ 국립공원지킴이(28억 원,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 추가 배치) ⑤ 5대강 환경지킴이(28억 원, 5대강 환경지킴이 200명 추가 채용) 사업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환경부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 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함.
 - *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의무자임(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함.(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810억원, '20년)의 70% 교부
 - * (개정) (기본요금) 전년대비 소각·매립량 증가시 40% / 감소시 60% 교부
(인센티브)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증가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 20%p삭감
- 또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
 - * 사람의 건강/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바로가기](#)

■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11(목),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함.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 안건 : 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 (실증특례) 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리걸인사이트) **디지털뉴딜**
 - ② 개인 맞춤화장품(아람휴비스) **디지털뉴딜**
 - ③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그랜마찬) **디지털뉴딜**
 - ④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에이치에너지) **그린뉴딜**
 - 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이온어스) **그린뉴딜**
 - ⑥ 신재생에너지-ESS 활용 전기차 충전소(이브이글로벌) **그린뉴딜**
 - ⑦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 ⑧-⑫ 공유미용실 서비스(미체 코스메틱 등 5건) **디지털뉴딜**
 - (임시허가) ⑬ 고침입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SK에너지) **그린뉴딜**
 - (적극행정) ⑭ 서냉슬래그 정제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에스피네이처) **그린뉴딜**

-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의 사업을 개시하여,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평가함.
-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21년 100건 목표)이라고 밝힘.

[바로가기](#)